

이의신청처리규정

제 정 : 2008. 12. 17
1차 개정 : 2009. 1. 7
2차 개정 : 2010. 7. 6
3차 개정 : 2010. 7. 28
4차 개정 : 2011. 6. 23
5차 개정 : 2011. 9. 27
6차 개정 : 2013. 1. 23
7차 개정 : 2014. 9. 15
8차 개정 : 2014. 11. 21
9차 개정 : 2015. 3. 9
10차 개정 : 2015. 7. 7
11차 개정 : 2018. 5. 24
12차 개정 : 2020. 3. 5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무역보험법 제57조에 의한 이의신청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협의회의 설치) ① 공사는 이의신청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이의신청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인수·보상 등 공사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검토
2. 기타 이의신청과 관련되는 사항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법령·약관 등에 의하여 명백한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2. 인수한도, 부보율, 보험료 등 무역보험 인수업무의 고유 재량사항
3. 제6조에 의한 이의신청의 접수기간이 경과한 경우
4. 협의회의 2회 이상 보정 또는 자료제출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인이 응하지 아니할 경우
5. 동일한 심의사항을 다시 이의신청한 경우
6. 기타 법령상 실현할 수 없거나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제 3 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1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사내위원과 사외위원으로 구분하고, 사외위원의 정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정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사외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 유고시에는 사외위원 중에서 연장자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사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법무담당부서장
 2. 업무연관성이 높은 인수 또는 영업기획 담당부서장으로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1인
 3. 리스크관리담당부서장
 4. 고객만족(CS) 담당부서장
- ⑤ 사외위원은 무역거래·상사중재·금융·경제 분야 관련 사외 전문가 중에서 사장이 위촉한다.
- ⑥ 제5항의 사외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1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⑦ 위원으로 선정된 자는 별지 2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⑧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법무담당부서 직원 중 법무담당부서장이 정한다.

제 4 조(사외위원자격) ① 사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자로 한다.

1. 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소송·법률사무 부문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무역거래·상사중재·금융·경제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관련분야 경력 등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선정에서 배제한다.
1. 심사 중 해당 이의신청인으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
 2. 위촉 시 경력, 학력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 전력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제 5 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사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장 및 사외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장 및 사외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 ② 사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 하더라도 해촉된다.
1. 심의·의결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2. 담당 심의·의결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
 3.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4. 위촉시 경력, 학력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 전력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5. 위원의 사임

6. 제8조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 6 조(이의신청의 접수) ① 공사가 무역보험법에 따라서 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없이 이의신청을 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무담당부서장은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이를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협의회에의 상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 7 조(회의의 소집) ① 제6조에 따라 상정요청을 받은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은 상정요청된 이의신청내용이 제2조 제3항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때에는 협의회에 상정하지 않고 자체 검토하여 이의신청인 및 처분부서에 회신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한 때에는 그 회의의 일시 및 장소를 개최일 5일 전까지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문서 또는 전자적 방법(홈페이지 게시, 이메일 통지)에 따라 알려야 한다.

③ 위원장은 개최일 3일전까지 의안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8 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배제)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이의신청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이의신청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이의신청건의 이의신청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당해 이의신청건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4. 이의신청건의 이해 당사자가 되는 경우
5. 최근 3년 이내에 당해 이의신청 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6. 기타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이의신청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협의회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장은 기피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위원을 심의에서 제외한다.

③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④ 사건의 심의·의결에 관한 사무에 관여하는 위원 아닌 직원에게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쟁점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관련 이의신청건으로 아래 각호의 사유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사장은 사내위원을 이의신청건의 심의·의결에서 배제할 수 있다.

1. 관련 이의신청의 총 합계액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
2. 이의신청인이 3인이상 연관된 경우
3. 사안의 성격상 수출입금융제도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제 9 조(회의의 의결방법) ① 협의회의 의결은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결정하되, 과반수의 동의가 없는 경우 다시 토의 후 표결을 거친다. 다만, 재표결에도 불구하고 과반수의 동의가 없는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대면심의·의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의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 중에서 해당 이의신청건의 처분부서장 및 제8조에 따라 제척·기피·회피·배제되는 위원은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3조제1항의 위원 정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위원의 대리참석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 10 조(추가조사 등)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인 또는 처분부서에 자료의 제출 또는 추가조사를 요청하거나 이의신청인 또는 관련 있는 임직원으로 하여금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의신청인에 대한 자료의 제출 및 추가조사시 추가 연장되는 기간에 상응한 일수만큼 처리결과통보기간이 연장되며, 이의신청인에게 연장사유와 처리 예정기한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 11 조(협의결과의 통보 및 처리) ① 협의회는 협의결과를 제10조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이의신청인 및 처분부서에 1개월 이내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처분부서는 협의회의 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이외에 약관개정 등 제도개선을 위한 사항이나 기타 공사의 업무방침에 관련되는 중요사항은 선임팀이나 기타 기획담당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련 부서의 선임팀이나 기타 기획담당팀은 3개월 이내에 법무담당부서장 앞으로 통보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12 조(수당의 지급) ① 사외위원이 회의에 참석 또는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수당을 지급한다.

1. 위원장 : 60만원 (세금 제외)
2. 사외위원 : 40만원 (세금 제외)

② 위원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 자에게는 위원장에 준하여 수당을 지급한다.

제 13 조(비밀유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은 심의·의결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고, 그 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 14 조(회의록 등 작성 및 보관) ① 회의록에는 회의의 명칭,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진행 순서, 상정 안건, 발언 요지, 결정 사항 및 표결 내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출석위원 전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② 전자적 장치로 녹음·기록된 녹취록으로 제1항의 회의록을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상정안건별 발언요지, 결정 사항 및 표결 내용 등은 서면으로 정리되어야 하며, 녹취록과 함께 3년간 보관한다.

제 15 조(세부사항)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법무담당본부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제 정)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9. 1. 1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접수한 이의신청부터 적용한다.

③ (관련내규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일로부터 ‘이의신청협의회요령’, ‘이의신청협의회 외부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기준’ 및 ‘외부전문가에 대한 자문료 지급기준’은 폐지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09. 1. 7부터 시행한다.

부 칙 (2)

(시행일) 이 규정은 2010. 7. 6 부터 시행한다.

부 칙 (3)

(시행일) 이 규정은 2010. 7. 28 부터 시행한다.

부 칙 (4)

(시행일) 이 규정은 2011. 6.23 부터 시행한다.

부 칙(5)

(시행일) 이 규정은 2011. 9.27부터 시행한다.

부 칙(6)

(시행일) 이 규정은 2013. 1.23부터 시행한다.

부 칙(7)

(시행일) 이 규정은 2014. 9.15부터 시행한다.

부 칙(8)

(시행일) 이 규정은 2014.11.21부터 시행한다.

부 칙(9)

(시행일) 이 규정은 2015. 3. 9부터 시행한다.

부 칙(10)

(시행일) 이 규정은 2015. 7. 7부터 시행한다.

부 칙(11)

(시행일) 이 규정은 2018. 5.24부터 시행한다.

부 칙(12)

(시행일) 이 규정은 2020. 3. 5부터 시행한다.

【 별지 1 】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연번	진 단 내 용	체크사항	
1	이의신청협의회(이하 "협의회")의 기능과 직접 관련된 업체를 경영하거나 근무하고 있다.	예 ()	아니오 ()
2	협의회의 심의 · 의결 대상사업 관련지역에 부동산 또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예 ()	아니오 ()
3	협의회의 직접적인 심의 대상이 되는 인가 · 허가 · 면허 · 특허 등의 당사자이다.	예 ()	아니오 ()
4	협의회 기능과 직접 관련된 공사 · 용역 · 계약 또는 연구 · 논문 등을 진행중이거나 진행할 예정이다.	예 ()	아니오 ()
5	협의회 직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 · 소송 등을 진행 중이다.	예 ()	아니오 ()
6	협의회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기관, 단체, 타 위원회에서 현재 활동 중이다.	예 ()	아니오 ()
7	협의회 기능 관련 정보나 심의 · 의결 결과가 본인의 권리 · 의무 관계 변동, 재산상의 이익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예 ()	아니오 ()

※ '예'라고 답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 ○ (서명)

한국무역보험공사 사 장 귀 하

서 약 서

직위 : 이의신청협의회 위원(장)

성명 : ○ ○ ○

상기 본인은 이의신청협의회(이하 “협의회”)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장)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1. 협의회 직무 수행에서의 공정 및 정치적 중립성 준수
2. 협의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3. 협의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공사·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4. 협의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동산·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5. 협의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 금지
6. 협의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할 경우 회피
7. 협의회 직무와 관련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해당 사업체 취업행위 금지
8. 협의회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향응·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알선 행위 금지
9. 기타 협의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금지

년 월 일

○ ○ ○ (서명)

한국무역보험공사 사 장 귀 하